

## ‘IPO 추진’ 케이뱅크, ‘흑자전환’ 토스뱅크

## 경영안정 위해 첫 연임 CEO 가능성

케이뱅크, 내년 목표로 상장 추진  
절차 진행 속 안정적 선택 가능성  
비연임 관행에 장담하기는 어려워

토스뱅크, 호실적에 임기연장 전망  
최근 내부통제 문제 부담요인 될 듯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 연임 사례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의 12월 31일 임기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행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는 이달 중 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추진 등을 앞두고 있어 최 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한국거래소(KRX)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 반드시 상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1월과 2024년 10월, 올해 6월 상장을 추진하다 수요 예측 부진과 고평가 논란 등에 따라 철회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표를 교체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연임 방향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의 호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128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주춤한 상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손진영 기자 son@

황이지만 대출비교서비스와 플랫폼 광고주의 등 비이자이익이 늘면서 포트폴리오는 탄탄해졌다.

다만 케이뱅크의 ‘비연임’ 관행은 최 행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이후 초대행장인 심성훈 행장이 3년 임기 만료 후 경영안정차원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 임기를 연장한 사례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연임한 적이 없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스뱅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인 이달 중 임추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이 대표는 토스뱅크의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어 임기연장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보다 약 136.2% 늘었다.

비이자수익은 1296억원으로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목돈 굴리기(WM) 부문은 누적 연계금액 20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토스뱅크

조원을 돌파하며 9개 제휴사와 2000여개 상품을 연계했고,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

그러나 토스뱅크의 내부통제는 이 대표의 연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 6월 재무조직 팀장급 직원 A씨가 법인 계좌에 들어온 세금 환급금 등 회사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토스뱅크는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개편한 이후였다. 내부통제부문에서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는 연임 심사 과정에서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수장교체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LH, 내년도 토지비축 사업 신청접수

내달 23일까지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공익사업을 도와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2026년 토지비축 사업을 신청받는다.

LH는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토지는 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한다. 보상이 끝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지자체는 공익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보상 관련 수행 조직과 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사업 장기화나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격정도 줄어든다.

공공비축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사업 선정은 공공토

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된다.

LH는 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기존 통합 설명회에서 1대1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개편했다.

LH는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개 사업(5.7조 원 규모)을 추진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사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 4365억원) ▲7개 산업단지(1조 3505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721억원) 등 총 3.6조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2025년에는 1024억원 규모의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과 220억 원 규모의 KTX 합천역세권 개발이 선정된 바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을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우리금융그룹, ‘기업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AI 경영혁신·ESG 실천 인정 받아

우리금융그룹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ESG 혁신 시상식으로, 산업 전반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금융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한 경영혁신과 체계적인 ESG 경영 실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고객 상담 플랫폼 ‘AI뱅크’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우리GPT’ 등 전 금융 프로세스에 AI를 본격 적용해 운영 중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내년 지방 주택담보대출 2단계 DSR 유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 회의’

전체 가계대출, 지난달比 증가폭 축소  
은행권 대출 줄고 제2금융권은 늘어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단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역 주담대 내년 6월까지 2단계 DSR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 적용비율 100%)며 지방은 1.5%(기본 적용비율 50%)다.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

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전세대출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 내) 감정 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 대출 누르니 2금융권 대출 ‘쑥’

지난 11월 국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 1000억원 증가해 10월(4조 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 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조 1000억원에

서 11월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성 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증가폭도 10월 9000억원에서 11월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중 2조 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 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 2조 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 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은행권(2조 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1조 2000억원→1조 9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중에 신용대출(9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10월과 같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그룹

## 신한금융그룹-우즈벡, 금융협력 확대 논의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와  
韓 기업 진출 확대 등 도모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진옥동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금융을 매개로 한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가 가진 높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